###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 2025년 주요업무계획

# 사람 · 기업이 모이는 투자환경조성 지원

##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수산업 키우기로
## 해양생태계 복원 · 항만연안 경제 육성도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국장 김미정)은 11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5년에는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새만금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새만금개발 지원과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해양수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정 국장은 "지난해, 새만금 대규모 투자유치에 따른 산업용지 적기 공급을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 3·7·8공구 조기 매립을 추진하였으며, 김제 용지 현업 축사 매입 근거인 새만금사업법 개정 등 새만금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였다"며, "수산 분야 전북형 특례 조례 제정, 토하 모하공급시설 건립,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개장, 크루즈 산업 육성 협력체계 구축 등 전북만의 특화된 수산물과 글로벌 항만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이어서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새만금의 투자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해양수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국장은 새만금 지원 수질과 관련해서는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새만금 투자 환경 조성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고, 수산업과 관련해서는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수산업 육성을 하며, 해양 항만과 관련하여 해양생태계 복원 및 항만 연안 경제 육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지원수질 :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새만금 투자환경조성 지원**

김 국장은 "MP·내부용지와 관련하여 새만금 산업단지 3·7·8공구 산업용지 우선 공급과 수변도시 2·3·4공구 착공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새만금개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에 전북자치도의 제안 사항이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며, "세부적으로 산업용지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메가시티 조성 및 SOC 연계 시설을 구축하여 정주 여건 개선 및 새만금 지역의 매립 및 개발 가속화를 위한 세부 로드맵도 마련한다"고 말했다.

김미정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이 11일 김 국장의 사무실에서 도 새만금해양수산국 업무와 관련 추가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수산업 :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수산업 육성**

김 국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대체 양식품종 시범양식 및 수산분야 특례를 통해 기후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지역 수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갯벌환경 변화로 생산성이 감소하는 바지락 양식을 대체하는 시범 양식을 새롭게 추진한다."며 "올해 고창 갯벌을 활용한 개체굴 시범양식을 통하여 전북자치도에 적합한 품종을 찾고, 2026년부터는 군산, 부안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양항만 : 해양생태계 복원 및 항만연안경제 육성**

김 국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폐기물의 체계적 관리 및 지속가능한 연안 이용 공간 확보로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한다."며, "도·시군 경계 해역 및 사각지대 전담 수거 인력 지정·운영(시군/3~4명), 유관기관 협업 강화, 어업인·민간단체 등 자발적 수거문화 확산 홍보 등 해양폐기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안을 이용할 수 있는 연안 보전 지역과 친수 연안공간을 확대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라며, "1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친 전북만의 특별한 수산 분야 특례 시행으로 전북형 수산업을 육성하고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새만금을 조성하는 등 새만금과 해양수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초지일관(初志一貫)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 대표성 · 권한 보장해야"

## 김희수 전북자치도의원
## "1기 운영 과정서 문제 드러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 6)은 11일 열린 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계 대표성과 실질적 권한이 보장된 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구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탄소중립은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산업 구조부터 일상생활 방식까지 사회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진정한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기 탄녹위의 운영 과정에서는 심각한 대표성 부족 문제가 드러났다. 위촉직 위원 32명 중 84%가 학계 및 공공기관 출신으로 구성되었으며, 노동계와 임업계는 배제되었다. 또한 50~60대 남성이 79%를 차지하면서 청년, 여성, 중소상공인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이는 탄소중립기본법 제15조가 규정한 '사회 각계 대표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김 의원은 형식적인 운영 방식도 문제로 지적했다. 청년 대표들은 실질적 권한 없이 '참여 명분'만 제공했으며,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었고, 심지어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 최종 보고서에 포함되는 등 불투명한 절차가 반복되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2기 탄녹위는 이러한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후, "2기 탄녹위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닌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심의·의결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이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다 민주적이고 포괄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 "인구감소 대응 미온적… 피해는 도민들에게"

## 도의회 의원들 5분 발언 잇따라… 군산항과 연계된 새만금신항 One-Port 전략 추진 등

11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6회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5분 발언이 잇따라 진행됐다.

김동구 의원

김명지 의원

김성수 의원

서난이 의원

윤영숙 의원

이명연 의원

**▲김동구 의원 "새만금신항·군산항 연계한 One-Port 전략 추진해야"**

먼저, 김동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2)은 "도지사는 새만금신항 관련 지자체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새만금신항은 군산항과 연계된 One-Port 전략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애초에 새만금신항은 지자체 관할권 논쟁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께서는 해수부의 의견을 기다린다는 중립적인 의견을 내세워 더욱더 두 지자체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도지사는 2026년 새만금신항의 개항을 앞둔 시점에서 더 이상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중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새만금신항은 군산항과 연계한 One-Port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새만금신항 건설기본계획에 따르면 새만금신항은 군산항의 수심 부족으로 인한 항만 능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되는 항만으로 명시되어 있다"며 "이는 새만금신항은 군산항과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시작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지 의원, 지역경제 회복·도민 기대 부응하는 인구 정책 촉구**

김명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1)은 "저수지의 둑이 무너져, 속절없이 물이 넘쳐흐르듯 도내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에도 적극성 없는 미온적인 대응으로 그 피해는 결국, 오롯이 도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정책 및 사업 마련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9년 181만9,000명의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인구는 연평균 1만6,000명씩, 5년 만에 8만명이 감소해 2024년에 174만명마저 붕괴됐으며, 2019년 32만2,000명의 청년인구는 연평균 7,200명씩, 5년 만에 3만 6,000명이 감소해 2024년에 29만 명도 채 되지 않았다.

**▲김성수 의원 "4조 투입하는 문화체육관광산업거점 조성 '속 빈 강정'"**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1)은 민선 8기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체육관광사업 거점조성 계획이 "속 빈 강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관영 지사는 2023년 4월 K-문화체육관광산업 거점 조성을 위한 비전 선포식을 대대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관영 지사는 4개년간 총 4조1,816억원이 투입되는 10대 전략 40개 실행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산업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계획에 반영된 세부 단위 사업 144개 중에서 민선 8기 신규사업이 24개(전체 사업수의 17%)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 사업들도 산업화와는 무관한 기존의 계속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서난이 의원, 난임휴가 사용 활성화 문화 조성사업 추진 촉구**

서난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9)은 전북자치도 난임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난임치료휴가 활성화 및 난임 지원사업의 범위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난임치료에는 극심한 신체적·심리적 고통은 물론이고 치료비용과 치료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신체적 고통을 제외한 심리적 어려움이나 만만치 않은 치료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세밀한 지원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비용적 측면에서는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가임기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인 현실을 감안하면 휴가시간을 맘 놓고 낼 수 없는 직장문화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또한, 서 의원은 "난임부부에게만 한정된 전북자치도 난임 지원 정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혼남녀의 가임력 보전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영숙 의원, 교육행정제도의 미비점 보완과 대책·개선방안 마련 촉구**

윤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3)은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교육행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에 관한 대책·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의 사망사건(이하 "해당 사건"이라 함)을 계기로 현시점에서 도교육청 교육행정제도의 맹점을 살펴 보고,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윤 의원은 이에 관한 대책·개선방안으로 △1인 행정실에 고경력자 우선 배치 방안과 행정실무원의 충원 방안 등을 포함한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의 적극적·종합적 재검토 △도교육청의 전보희망제 개선 △직장 내 괴롭힘과 지나친 업무 스트레스 해결 대응책 마련과 매뉴얼 개발 등을 제안하며 반영을 촉구했다.

**▲이명연 의원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체계적 준비 필요"**

이명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0)은 "전북자치도가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을 위해선 전담 조직 신설과 규제 특례 발굴을 통한 차별화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김관영 지사는 2023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해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강조했으나,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3차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전북자치도는 88만 평이 지정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북자치도의 체계적 준비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이만호 기자

# "헌정 파괴행위 파면돼야"

## 장연국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의회 교섭단체 연설
## "민생경제 회복 위한 특단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
## 최첨단 기술 활용 광역교통망 체계 구축 방안도 제시

장연국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11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6회제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연설을 통해 "12·3 내란사태와 관련,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와 중요임무 종사자들은 전 국민이 TV를 보는 앞에서 용납할 수 없는 헌정 파괴행위를 자행했다"며 "파면되어야 하고 형사법정에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12·3 내란사태에 대한 본격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죄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즉시 철회할 것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농민들을 비롯한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와 전북도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연국 의원은 "고물가·고금리 완화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상당하고, 내수부진과 수출 둔화가 우려되는 만큼 공공재정과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 정책 금융 등을 적기에 투입·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확대 등 도민의 민생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마련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연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 특례발굴은 물론 전북특별자치도 핵심 현안인 첨단전략산업 지원 및 유치, 첨단 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 등 미래첨단기업의 발굴·유치·육성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상임위원회와 각종 특별위원회, 연구단체 등을 통해 점검·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구소멸 위기 가속화에 한몫하는 '광역대중교통의 오지'를 벗어나기 위한 전략으로 선진국이나 대한민국이 추진·연구중인 각종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시범사업들을 활용한 광역교통망 체계 구축 방안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장연국 대표의원은 "지방자치사무 확대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증대되고 있다"며, "강원·제주 등 4개 특별자치시도의 회협의체를 구성해 지방의회 인사권·조직권·예산권 완전독립, 의원정수 확대 및 정무보좌관제도 도입, 정책지원관 직급 상향 법제화 등을 특별자치시도의회에 우선 적용하도록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정읍시의회 임시회 개회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11일 제30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이상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청춘을 돌려주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통해 경로당의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 등과 운영 지원의 현실화가 시급함을 강조했고, 서향경 의원은 '공공 텃밭 정책 확대 및 활성화 제고를 바라며'를 통해 유휴부지를 이용한 공공 텃밭의 공간 확대와 초보자를 위한 농업교육 등의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고경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난방용 면세경유 재도입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일정은 상임위원회별로 12~18일 2025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5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계속돼야"

## 김슬지 전북자치도의원
## "거부권 행사로 근간 흔들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기획행정위원회)이 11일 제416회 임시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슬지 의원은 "지난 1월 최상묵 권한대행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고교 무상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부권 행사로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해야 할 공교육의 지역간 격차 발생, 질적 저하,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초래할 것이란 주장이다.

김 의원은 "헌법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고 강조하며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